

##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는 방향으로...

지난 한 해도 서로 소통하며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슬한 갈등과 분열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를 음습해온 한 해였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미 FTA가 체결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말그대로 Free Trade를 목적으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없앴으로써 양국간에 서로 상호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무상원조를 받아야만 했던 과거에 비해 대외수출규모 세계 9위의 성과를 올린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이며, 수출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 된 한미 FTA 논의가 4년 여를 지나 이제야 한미 양국의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국론분열을 경험하게 되었고,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위 협정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FTA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숙명인 것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과실(果實)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낙후된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선진화된 미국의 산업에 밀릴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 우리의 산업화시대에 수출을 통한 열매가 일부의 국민에게만 분배되어 대다수 피땀흘려 이룩한 성과가 평가절하되는 현상이 앞으로는 재연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그러한 성과가 어떻게 배분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관해 공론의 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Facebook이나 Twitter와 같은 SNS를 통한 ‘똑똑한 군중’이 철저히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여론의 자유화가 일반화되었다.

정 상 훈  
(월간 고시계 · 도서출판 고시계사 대표)



이런 상황에서 차후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정책당국의 추상적이면서도 지엽적인 공언(空言)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음을 정부 위정자들은 명심하고, FTA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법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집단이기주의의 팽배이다. 우선 검경수사권조정문제를 들 수 있다. 요지는 수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내사단계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양 기관간의 권한의 다툼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양 기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기관이기주의로 보이는 행태는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결정은 국민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애매하게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직접적이고 민의에 그나마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민주주의의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고려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1월 3일부터 치러지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임박했다. 1500여명이 넘는 숫자가 로스쿨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회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로스쿨 졸업생들이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쯤되어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도 나름 의미가 있는 제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행초기라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전체의 사회적 공감대를 벗어난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제도 때문에 그 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다. 예컨대, 작년의 경우에도 사법시험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거나, 소위 노장합격생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로스쿨제도만 시행되었다고 하면 과연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라는 가정적 물음에 대해 회의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무릇 제도란 1%를 위한 것이 아니라, 99%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을 쌓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 진입장벽을 높게 쌓을수록 국민의 편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가진 국민이 학벌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실은 막아야 된다고 본다. 기존의 사법시험도 충분히 순기능을 해오고 있다.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도의 존속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구지 이러한 투트랙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 부담이 된다면, 예비시험이라든지 통신로스쿨의 설립도 괜찮다고 생각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예비시험을 도입·시행하고 있고,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비인가대학에서 조차 혹은 통신교육만으로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는 부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풀려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저마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결실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해 본다.